

# 한국의 고용관계

## 노사관계의 이론과 실제

오성재

충남대학교 경제학과

2024년 9월 9일

# 목차

## ①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

- 노동운동 태동기 (1876년-1919년)
- 일제하의 고용관계 (1920년-1945년)
- 미군정하의 고용관계 (1945년-1948년)
-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 (1948년-1960년)
-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(1961년-1987년)
-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 (1987년-1996년)
-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관계 (1997년-2007년)
- 2008년-현재

## 학습목표

- 우리나라 고용관계 발전과정과 각 단계별 특징 시대순으로 설명 할 수 있다.

- 1876년: 강화도 조약 체결, 조선 강제 개국
- 1888년: 함경도 초산금광에서 최초의 노동쟁의 발생
- 1898년: 함경도 성진에서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
- 1910년: 한일합방
- 1919년: 3·1 독립운동 발생

- 우리나라는 일본자본주의의 침투에 의해 상품 및 원료시장의 식민지로 전락
- 임금노동의 형성은 각 개항장의 물동량 증대로 인한 부두노동자의 증가로부터
  - 경우에 따라서 변두·접장·십장 등의 통솔 하에 무형의 조직으로 단결
- 식민지에 필요한 가공업의 점차적 발달로 공장노동자의 형성

- 1920년: 최초의 전국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결성
- 1922년: 사회주의 계열 조선노동연맹 결성
- 1928년: 영흥 총파업 (한국 최초의 지역 총파업)
- 1929년: 원산 노동자 총파업 (일제하 최대 규모)
- 1938년: 중일전쟁 발발, 노동조합 활동 금지

## 특징 및 의미

- 일제는 조선에서의 독점자본 확립 및 착취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시행
  - 조선에서의 회사설립 허가주의 (조선회사령)를 철폐
  - 적극적인 자본수출정책 추진
-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민족독립투쟁의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는 고용관계
  - 사회적·경제적 이익 수호 및 노동3권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권리 확립
  -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강화를 통한 세계평화의 옹호
- 현실비판적·정치지향적·투쟁적 성격
  - 일제의 탄압으로 지하운동화하여 공산주의와 연계

## 고용관계의 주요사건

- 1945년: 8·15 해방 및 미군정 개시
  - 미군정 노동쟁의 중재를 포함한 노동보호에 관한 법령 공포
  - 좌익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(전평) 결성
- 1946년: 최고근로시간과 연소노동에 관한 법령 공포 (주당 48시간), 대한노총 결성, 9월 총파업 생
- 1947년: 전평이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, 보건사회부 산하 노동국 설립



## 특징 및 의미

- 노조의 활동이 자유롭게 활성화
-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간·노사간의 대립과 충돌 심화
  - 1945년 급진좌경 색채를 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(전평)이 결성
  - 1946년 우익의 상층지도층은 대한노총을 결성
- 이 시기 노동운동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수준과는 거리감 존재

## 고용관계의 주요사건

- 1948년: 제1공화국 탄생
- 1950-1953년: 한국전쟁
- 1953년: 노동조합법, 노동쟁의조정법, 노동위원회법, 근로기준법 제정
- 1959년: 대한노총 분열에 이어 전국노동조합협회 (전노협) 결성
- 1960년: 4·19 혁명으로 제1공화국 종식, 대한노총과 전노협이 전노협으로 결합

## 특징 및 의미

- 미국의 신탁통치 영향으로 미국식 단체교섭의 고용관계 방식 채택
-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지 못함
  - 전평을 타도한 대한노총은 친정부적 정치성향과 내부 갈등 존재
  - 사회적·경제적·정치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노동운동 전개가 어려움
- 물가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보상, 체불임금 지급 등 임금문제가 주요 노동쟁의의 원인
- 4·19혁명 이후 정치적·사회적 여건 미성숙으로 고용관계의 획기적 전환 불발

## 고용관계의 주요사건

- 1961년: 5·16 쿠데타로 제3공화국 출범
  - 모든 노동조합은 해체후 산업별 노조로 전환,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설립
- 1963년: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개편
- 1972년: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립
- 1975년: 근로기준법 개정 (5인 이상 사업에 적용/일부규정은 15인 이상에만 적용)
- 1980년: 5·17로 제4공화국 종식
  - 노동조합법, 노동쟁의조정법, 노동위원회 개정, 산별노조체제를 기업별노조로 전환
- 1981년: 산업안정보건법 제정/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
- 1986년: 최저임금법 제정

## 특징 및 의미

- 경제개발과 노동운동 (1961~1970): 5·16쿠데타 이후 정부의 고도경제성장추진
  - 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전환
  - 노동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주무기관을 노동국에서 노동청으로 승격
  -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식, 노·사 모두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에 압도

## 특징 및 의미 (계속)

- 노동기본권 제약하의 노동운동 (1971-1979): 수출 및 중화학공업의 육성, 국가안보 우선
  - 70년대 초반 비상사태 및 유신헌법 등을 근간으로 노동운동의 엄격한 규제,
  - 정부주도형의 고용관계 구축,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제약
  - 근로조건의 개선 미흡, 산업간·학력간·남녀간의 임금격차 심화 등 근로자의 불만 표면화
  - cf. 전태일 사건: 1970년 11월 동대문평화시장의 피복공장 재단사인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자살, 한국노동운동의 출발점

## 특징 및 의미 (계속)

- 신군부정권의 억압과 노동운동 (1980-1983): 국가안정의 명목으로 노동운동을 과거보다 더 제약
  - 기업별 단위노조의 기능 강화, 노조 하부조직의 잦은 상부조직 비판
  -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참여화
  - 근로자들의 연대강화, 자연발생적 노동운동의 조직화, 재야노동운동세력 형성
- 유화국면과 노동운동의 활성화 (1984-1987초): 정치적 유화기를 맞아 노동운동의 활성화
  - 노동운동을 사회변혁의 중심으로 부각
  - 노동운동의 조직과 투쟁노선을 둘러싼 논쟁과 실천활동 전개

## 고용관계의 주요사건

- 1987년: 6·29 민주화 선언과 노동자대투쟁
- 1990년: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
- 1991년: 국제노동기구 (ILO) 가입
- 1995년: 민주노총 결성
- 1996년: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, 노동법개정으로 대규모 시위 발생



## 특징 및 의미

- 노조 조직역량의 확대와 민주노조운동 기반구축 (1987~1988): 노동운동발전의 획기적 계기
  -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: 대중적 항쟁의 성격을 띄며 전국적·전산업적 범위에서 동시적으로 표출
  - 임금·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 분출, 기본권리 보장 강력 제기
  - 자생적으로 파업투쟁이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연대투쟁 시도
  - 중화학공업, 생산직, 남성 노동자층이 주도세력으로 등장
  - 87년 민주화투쟁을 계승하고 타 민중운동 및 사회운동발전의 기폭제 역할

## 특징 및 의미 (계속)

- 노동운동의 침체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기 (1989-1995)
  - 노동운동의 조건과 국가-자본-노동관계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노동운동 방향전환 모색
  - 김영삼정권의 등장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강압적 통제 완화
  - 노동운동이 조직개편과 활동강화 등 재정비, 민주노동조합총연맹 (민주노총) 결성

## 특징 및 의미 (계속)

- 노동법 개정과 총파업 투쟁 (1996~1997)
  - 1996년 말 노동법 개정에 대해 총파업 투쟁 결행: 97.3.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
    -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
    - 노조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
    - 복수노조 단계적 허용
    -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
    - 무노동·무임금 원칙 명문화
    - 정리해고제 법제화
    - 변형근로기간제 도입
  - 집단적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제도적 기반 확보

## 고용관계의 주요사건

- 1997년: 아시아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
- 1998년: 김대중정부 출범, 노사정위원회 설치, 노동시장 유연화대책 시행 합의
- 1999년: 민주노총 합법화
- 2001년: 노사정위 (주 40시간 근로제 원칙적 합의)
- 2006년: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
- 2007년: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,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

## 특징 및 의미

- 1997년 외환부족사태를 IMF 및 국제자본의 금융지원으로 해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실물경제의 위기는 외자유치와 내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고통분담 등으로 극복
  -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(노사정위원회) 설치 운영
  -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확대 시행
- 1998년 2월 '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'을 도출,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
- 2000년 이후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,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빈부격차 악화
  - 비정규직 등의 분규는 증가한 반면 대기업 분규는 줄어드는 노사분규의 양극화 초래

## 특징 및 의미 (계속)

- 노무현정권은 공무원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권 인정, 비정규직법안 입법
  - 노동계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및 비정규직 법안 철폐 등을 요구
  - 노사정의 갈등 격화
- 노조조직률은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
  - 일부 노조지도부의 부패, 노조의 강성 일변도의 극한적 투쟁 등으로 여론 악화
-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처우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

## 고용관계의 주요사건

- 2008년: 미국발 금융위기/이명박정부 출범
- 2009년: 「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」 채택
- 2011년: 기업 내 복수노조허용/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(타임오프제도) 시행
- 2013년: 박근혜 정부 출범
- 2015년: 9.15 노사정 대타협
- 2017년: 박근혜 대통령 탄핵/문재인 정부 출범
- 2018년: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/주 52시간 근무시간제 실시
- 2020년: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체결/사회적 거리두기 실시
- 2021년: 중대재해처벌법 시행

## 특징 및 의미

- 2008년 미국 발 부동산 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 발생,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이 강화
-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『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』을 채택함
- 2011년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제도 (타임오프제도)가 시행됨



## 특징 및 의미 (계속)

- 2017년 5월에 문재인정부 출범
  - 이전 정부가 만든 양대 지침 (저성과자 해고지침, 취업규칙완화 지침)의 폐기를 선언
- 2018년 6월에는 사회적 대화 기능을 기존의 노사정을 넘어 청년, 비정규직, 여성 등 다양한 사회주체로까지 확대하고자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
- 2018년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
-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을 체결 (민주노총은 최종 불참함)
  -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
-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